

저자 (Authors)	김동춘
출처 (Source)	<a href="#">실천문학</a> , 2010.2, 330-342 (13 pages) <a href="#">Silcheonmunhak</a> , 2010.2, 330-342 (1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실천문학사</a>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26658">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26658</a>
APA Style	김동춘 (2010). 4 · 19혁명과 사회과학. 실천문학, 330-342.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220.149.185.50 2016/01/06 20:4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4 · 19혁명과 사회과학

### 1. 4 · 19혁명, 50년

4 · 19혁명은 그 과거와 연관시켜 보면 외세 주도의 1945년 8 · 15 해방을 주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혁명이었고, 거시 역사적으로 보면 조 선왕조의 봉건체제, 식민지 총독부 전체주의체제, 이승만 정권의 권위 주의나 독재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국 관 부르주아혁명의 일종이었으며, 그 이후에 전개된 일들과 연관시켜 본다면 근대화, 경제성장의 시위를 당긴 근대화 혁명이었다. 국제정치 적인 맥락에서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냉전 우 산에서 처음으로 반 발자국 정도 벗어나 이제 일본, 유럽, 남미, 중동 여러 나라와 실질적 외교관계가 시작된 계기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시작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였는데, 널 리 알려진 대로 그것은 미국의 오랜 지역통합 전략과 적극적인 주선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결국 4 · 19는 청년 학생이 주동이 된 국민 대중의 힘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퇴진시킨 점에서 한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5·16쿠데타로 인해 반동적 개혁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5·16 군부세력이 4·19 당시 제기된 민주화·근대화·통일의 역사적 열망 중 근대화와 빈곤 극복이라는 과제만을 제한적으로 수용하여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고, 미국의 우산 아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5·16 군부세력이 4·19의 주체라는 것은 아니며, 5·16이 4·19의 계승이었다는 말도 아니다. 단지 4·19라는 정치적 계기가 없었다면 5·16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1960년 4·19는 스탈린 사망 후 상대적으로 개방된 흐루쇼프체제의 등장, 1956년 헝가리에서의 반소자유화운동, 1955년의 반동회의 개최 등 소 냉전 대결체제가 이완되는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비록 당시의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국제정치적 변화의 흐름에 편승할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고, 미국의 군사 정치적 보호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운신의 폭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탈냉전이 시작되는 국제정치적 흐름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민족사적으로 본다면 1910년에서 1960년까지의 반세기 동안의 일본제국주의에 식민화와 미·소 양 강대국에 의한 분단·국가억압·관료주의체제에서 벗어나는 주체적 계기가 되기는 했고, 따라서 구한말 개화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유보되었던, 근대 부르주아적 개혁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4·19혁명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19세기 프랑스가 겪었던 일련의 왕정복고-쿠데타-전체정치의 흐름이나 바이마르공화국 이후 등장한 히틀러체제, 다이쇼(大正) 민주주의 이후 등장한 일본의 천황제 군부독재체제처럼 일련의 구세력의 반동을 불러왔는데, 그것이 한

국에서는 그 후 약 30여 년 동안의 군부의 집권으로 드러났다. 즉 4·19 자유민주혁명 이후 5·16 반동 쿠데타로 인해 이승만 정권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억압적인 군부독재, 공안사찰기관, 정치공작, 국민감시체제가 도래하였으며, 당시 군부세력은 빈곤 탈출의 열망을 갖고 있던 전 인구의 70퍼센트에 해당하던 농민을 근대화의 구호하에 자기편으로 포섭하여 일종의 우파 포퓰리즘(populism)의 정치를 펼쳤다. 히틀러의 과시즘이 경제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던 대중의 불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자리·경제성장이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권력을 안정화시켰듯이 군부정권 역시 경제제일주의·수출제일주의·성장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삼아 지식인과 학생의 저항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4·19혁명 이후 지금까지 50년은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독재(민족자주/외세의존, 통일·남북화해/반공·남북적대)라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근대화 이후 서구가 겪었던 사회경제적 갈등, 즉 시장자유주의/반독점 평등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 반세기 동안의 갈등은 바로 4·19혁명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히 1960년 3·15부정선거 반대, 반부패, 정권교체, 절차적 민주주의 수립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한다면 4·19혁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서 완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골적인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유린을 지탱해주던 제1공화국 경찰과 관료기구의 개혁, 이승만 정권을 지탱했던 일제 식민지 세력의 청산, 정치사회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4·19혁명은 그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더구나, 4·19혁명을 이승만 퇴진 이후 1년 동안 진행된 통일운동, 사회개혁운동, 민중운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즉 최고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기구나 경찰, 사법부와 언론을 자신의 수족처럼 다루던 유사 봉건체제로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추

진했던 4·19혁명은 확실히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권력이 사실상 자본과 한 몸이 되어 입법·사법·행정·언론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고, 공권력이 결국 민의 편이 되기보다는 대자본을 비롯한 힘센 자의 도구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부활이며, 따라서 이 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4·19혁명을 필요로 한다.

역사는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회전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과거로부터 벗어났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죽은 과거가 여전히 세련되고 진화된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일을 겪고 있다.

## 2. 4·19혁명이 띄워준 시야

4·19혁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의 피의 대가로 성취한 것이다. 이승만은 끝까지 권좌에서 버틴 후에 수백 명을 희생시킨 후에야 물러났으며, 비록 이승만은 물러났어도 이승만 정권을 지탱했던 자유당세력·사법귀족·구친일관료·경찰간부·지방의 토착 보수세력들은 끊임없이 재기를 도모한 끝에 결국 4·19혁명을 무산시키고 5·16 군사쿠데타를 성사시켰다. 결국 4·19혁명은 절반의 성공만 가져오고 말았으며, 그 과실은 군부세력이 거두어갔다. 그리고 일부 4·19 당시의 학생 주동자급 인사들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피를 거름으로 삼아 정치적 지위를 얻는 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상당수는 군부세력에 협력하여 자유민주혁명으로서 4·19혁명의 대의를 배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 4·19혁명의 의의와 정신은 살아 있고, 그것은 소수의 참가자들과 이후 민주화세력에 의해 계승되었다.

4·19혁명이 가져온 인식론적 전환의 출발점은 ‘세대’로서의 자의식이다. 즉 기성세대와 4·19 데모 참가세대의 심각한 대립의식이

4·19 당시의 정치적 균열의 축이었다. 이 단절은 송건호가 구세대를 이(利)의 세대, 참가세대를 의(義)의 세대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부패·부정·독재·편법·탈법에 협력하거나 침묵했던 기성세대와 그것에 저항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젊은 세대 간에 형성되었다. 이 세대의 주요 구성 인자는 바로 중고등·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초등학생까지 참가하기는 했으나 가장 앞장서서 데모에 참가했고, 가장 많이 희생되기도 한 중고등·대학 교육의 수혜를 받는 한글세대가 바로 부정·부패·반민주로 집약되는 기성세대와 구별 짓기를 시도한 주역들이다. 이승만의 퇴진을 계기로 형성된 이 세대의 자의식은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 테러·고문 등 국가폭력, 전쟁기의 학살, 조봉암의 사법 살인 등을 겪은 후의 공포와 피해의식 때문에 스스로의 아무런 자의식도 정치의식도 갖지 못한 채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일부 기성세대에게까지 충격을 주었고, 급기야 광범위한 시대인식으로 발전하였다. 이 참가자의 세대인식은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 당일부터 이듬해 5·16 직전까지 계속 진화해나갔다. 그래서 데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한 세대가 그 이후의 모든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당시 이들은 연령은 아직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 초반 정도의 청년이었지만 실제로 당시 정치와 사회에서는 ‘어른’의 역할을 하였고, 실제 아무런 발언권을 펴지 못했던 기성세대 장년·노년의 어른들, 구자유당세력들은 마지못해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형편이었다.

이 저항세력의 세대인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체’의식이었다. 즉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혹은 민족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한국전쟁 발발 후 10여 년 동안 이승만을 포함한 정치권과 지배층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갖고 있던 견해, 즉 국가를 구해준 은인(再朝之恩)이라는 조선 양반관료층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한·미관계는 피를 나눈 관계

(헐맹)로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곧 미국이며, 한국의 모든 가치는 미국과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며, 이것은 당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경제와 군사를 꾸려나갈 수 없었던 엄연한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실제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독재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자유세계’에 속해 있다는 비뚤어진 제1세계의식,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봉건적 가부장주의 정치의식에 지배되고 있었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 주던 이승만의 퇴진은 한국인들에게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4·19혁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권위는 부정되기 어려웠지만, 이승만의 권위가 완전히 부정됨으로써 이제 한국인들은 1948년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갈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즉 한국은 자신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비록 1960년은 전쟁이 끝난 후 7년밖에 안 된 시점이기는 했으나,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독자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논문이나 에세이·평론은 거의 없었다. 당시의 모든 지적 생산물은 일본이 남기고 간 것이거나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었고, 번역서가 도서관과 서점을 채웠다. 1950년대 한국은 전통을 상실한 존재였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신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구체적 정치·경제·사회는 1960년 4월 혁명을 기점으로 비로소 인식의 대상, 더 나아가 실천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정신적 유아기 상태는 흔히 말하듯이 한국이 ‘근대화’의 궤도에 들어서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소가 만들어놓은 냉전 세계질서하에서 미국이라는 후원 국가에 절대 의존한 상태에서 오직 미국만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8년 이전인 해방 정국에서는 일부 좌파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사전도 편찬한 바

있으며, 조선의 경제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도 나와 있었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번역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최남선과 김성철은 조선역사와 조선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집필을 한 적이 있었다. 헌법 기초단계에서도 한국의 헌법에 담을 내용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나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회과학적 논쟁이 있었다. 조선이라는 역사정치공동체, 조선이라는 경제사회 단위를 인식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았던 해방 정국의 짧은 경험은 한국전쟁 발발과 더불어 전혀 계승되지 못했다. 그런데 4·19혁명의 주역인 청년 학생들은 전쟁 발발 이전에 전개되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마치 세상에 처음 나온 존재처럼 생각하였다. 그들은 해방 정국의 역사적 기억을 차단당한 채 한국의 첫 한글세대,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첫 세대임을 자임하였다.

이들이 4·19를 계기로 획득한 주체의식은 왜 부패와 독재로 얼룩진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집권할 수 있었는지, 왜 한국은 분단이 되었는지, 왜 정치혁명으로 4·19혁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한국의 지식인들은 독재정권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적 인식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정치·경제·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 잘사는 나라의 건설, 그것은 시대의 과제였고, 4·19혁명 가담 주체의 온 세계를 지배하였다. 이들이 만들어놓은 혁명의 정치 공간 위에 독립운동의 기억, 민족분단의 기억, 전쟁의 기억을 가진 극소수 기성세대들이 슬금슬금 나타났다. 이들은 정당과 사회단체를 결성하였으며, 1948년 당시 실패했던 통일문제를 낡은 칼집에서 다시 꺼냈다. 그러나 1948년 당시 제기되었다가 지연된 민족문제는 극히 소수의 청년들에게만 다가갔을 따름이고, 동시대인들이 공유한 세대인식으로 발전, 주체화되지는 못했다. 1년이라는 각성의 기간은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한다”는 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지적



인 무기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러나 4·19혁명에서 만들어진 주체의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역사학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로소 사회과학이 등장할 수 있었다. 한국 근대사, 한국 문화, 한국 철학, 한국 지식인과 지성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모두가 근대화 혁명으로서 4·19혁명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었다. 일제시기,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바로 주체에 눈을 뜬 청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첫 시도였는데, 5·16이라는 반동의 분위기가 압도하였던 1960년대의 분위기, 여전히 주체를 찾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반공주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이며 존재 근거라고 믿고 있었던 친일 냉전세력이 지배하던 당시의 실정에서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다.

### 3. 4·19혁명과 사회과학

4·19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이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대학은 체제 순응적인 어용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4·19는 모든 사회과학자들을 각성시켰다. 4·19혁명이 그 이후 한국의 사회과학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근대화’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그 화두는 4·19 당시 참여자였던 학생들이 이후 한국의 지식사회에서 성장해가면서 씨름하였던 주제이자, 반드시 4·19의 주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4·19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눈을 뜬 당시의 기성세대 사회과학자·운동가들이 고민하였던 쟁점이었다.

반독재 부르주아혁명의 일종으로서 4·19혁명은 18~19세기 부르주아혁명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대혁명 이후 영국·프랑

스·미국 등에서 처음으로 근대 사회과학이 대동하고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꽃으로 등장하였듯이,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식민지 시기 이래 지배와 통치의 학문으로서 가장 인기 있었던 법학과 정치학 대신에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게 하였다. 근대화혁명으로서 4·19혁명은 역사학자들에게는 독립운동·분단·남북관계·한미관계 재조정·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정치적 의제를 부상시켰지만,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서구에 비해 자본주의 발전에서 뒤쳐진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경제개발·정치민주화·반부패사회계층 분화와 갈등 등의 매력적인 주제를 던져주었다. 그래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에서 사회과학은 4·19를 기점으로 시작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4·19 이후 1960년대 사회과학계의 논쟁 구도나 이후 4·19세대의 정치적 분화도 사실상 4·19혁명에서 제기되었던 반독재 민주주의와 정치 근대화, 그리고 4·19를 계승한다고 자임하였던 5·16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성장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4·19 당시 제기되었던 근대화의 과제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세력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들은 박정희 군사정권을 지지하였으며, 여기서의 근대화를 경제성장과 발전으로서 근대가 아닌 정치·사회·사법 영역에서의 민주화로 보았던 사람들은 1960~1970년대 전 기간 동안 박정권 비판세력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프랑스혁명을 이론화한 헤겔을 시원으로 하여 헤겔 우파와 헤겔 좌파가 나누어지고, 애덤 스미스에서 마르크스가 나오고, 생시몽에서 콩트와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이 나왔듯이, 부르주아 정치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정치경제학과 근대 사회학,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백가쟁명의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듯이, 4·19를 시원으로 하여 1960년대 한국에서도 박정희 군사정권이 주도한 근대화, 경제성장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우파 사회과학과 그것의 정치적 비민주성, 경제적 모순

등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사회과학이 분화되었다. 특히 4·19 직후 1년 동안의 지적인 해방의 분위기를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한국이 후발 자본주의국가라는 현실인식과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 활발하게 모색되었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민중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적인 발전전략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급진파도 형성되었다.

전자를 4·19 우파로 보고, 후자를 4·19 좌파로 본다면 박정희 정권의 군사주의적 측면, 특히 유신독재체제의 성립은 4·19 우파의 입지조차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체제를 지지했던 독일의 관변 법학, 사회과학자와 같이 유신체제를 옹호했던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다수 소장 사회과학자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내심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4·19 우파의 주요 세력인 기독교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을 내걸고서 아직 발육부전 상태에 있던 제도권 사회과학이 담당해야 했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4·19 좌파의 입장은 주로 박정희 정권하의 재벌 위주 성장정책과 도농 불균형, 점증하는 노동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일부 진보적인 4·19세대와 이후 학생운동세력에 의해 대변되었다. 1960년대 후반의 중산층 논쟁,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제창한 대중경제론, 1970년대의 사회과학 주제화 논의,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조용범·유인호 등의 후진국 경제론 등은 모두 이러한 ‘4·19 좌파’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정치학·법학에서는 4·19가 제기한 근대화·민족주의·민중주의를 계승한 별다른 지적인 흐름이 없었으나, 경제학에서는 일부 급진주의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 지향을 가진 소장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현실 운동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1980년대 이후 정치경제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안병직의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 4·19세대의 근대화 문제의식은 처음에는 급격히 좌로 경도되었다가 1990년대 이

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극단적인 우파로 이동하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발전은 4·19혁명의 완성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민주화의 문제의식을 사상한 점에서 4·19세대 사회과학자들의 입장의 변화는 혁명을 배신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4·19세대 사회과학자들의 이러한 변신은 4·19세대 일반의 변신의 흐름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실제 4·19세대임을 자처하는 사회과학도들은 일찍이 이미 1970년대 유신정권에 투항을 했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1990년대 신한국당, 한나라당에 차례차례로 진입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4·19세대 중에서 4·19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라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4·19를 폭력으로 진압했던 자유당·이승만·친일세력 등 극우파의 정신과 세계관을 견지하는 사람은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치변혁으로서 4·19혁명은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그 주역들의 투쟁 역시 크게 기억할 만한 것이지만, 정신사나 사상사의 흐름에서 보면 4·19혁명의 자취는 너무나 초라하다.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한국의 발전 전략 수립에서 박정희 모델에 대한 이해, 한미관계와 남북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변화의 대안 마련 등으로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어야 했다. 그러한 임무는 리영희·송건호 등 일부 언론계에 몸담았다가 4·19를 맞이했던 당시의 삼십대 기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계승되었고, 나머지 4·19세대 자체의 기여는 너무 취약하다. 정치가 중에서는 비록 4·19세대는 아니지만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 볼 수 있고, 김대중 역시 그러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 4. 4 · 19혁명 반세기, 어제와 오늘

4 · 19혁명은 이식된 민주주의를 우리 민중의 힘으로 되찾은 혁명이었다. 이식된 민주주의를 한국인의 피와 살에 침투한 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인 진통과 노력이 필요했다. 4 · 19혁명 당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사회과학적 고민은 제도권 학계로 계승되었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 체제변혁운동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기 사회과학은 대학의 강의실에서보다는 대학생 · 대학원생의 세미나, 그들이 주로 번역한 외국 서적, 운동 팸플릿, 문예지 등에 게재된 사회평론 들에 살아 있었다. 그래서 4 · 19혁명의 정신은 1970~1980년대 재야에서 비판적 사회과학을 학습한 사회운동가나 학생들에게 연결되었고, 그것은 오늘까지 한국사회과학의 비판적 실천적 정신으로 살아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러한 재야 사회과학, 자취방 사회과학, 비제도권 사회과학 역시 커다란 지적인 울림을 주는 성과를 별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독재정권 · 권위주의 학계와 언론계와 투쟁하는 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 1990년대에는 점차 대학이 이러한 열정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업적’을 채우기 위한 학술논문은 양산되고 있으나, 당면의 정치경제 현실을 둘러싼 사회과학적 논쟁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4 · 19혁명은 인식과 실천의 주체를 세우자는 혁명이었고, 우리 스스로 근대화의 길을 가자는 혁명이었으나, 한국의 대학에는 점점 한국 경제 · 한국 정치 · 한국사회를 다루는 과목은 축소되고 있고, 어설픈 글로벌 스탠더드가 압도하여 영어로 한국사회를 강의하고 토론하면 한국 사회과학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가정들이 지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무엇보다도 사상과 이론의 지배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설과 이론적 전제를 비판하는 논의는 대학에서 실종되었다.

4·19혁명 반세기라는 시간적 경과를 우리에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오늘의 대학은 강압적 통치 대신에 자본의 식민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사회과학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학자들의 밥벌이와 업적 쌓기 용 논문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과연 4·19혁명이 던진 근대화혁명의 메시지는 학문 사회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4·19혁명 반세기를 지난 오늘, 성찰과 전진을 위한 새로운 토론 마당이 필요하다.

김 동 춘

1959년생.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저서로 『전쟁과 사회』,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등.